

부동산 대책 DTI 푸느냐 마느냐

정부 부처·정치권서도 “규제 풀자” “시기상조” 논란 가열

광주·전남 주택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세제확대” 촉구

정부가 22일 발표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현안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은 재보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며 지나친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를 포함한 주택건설업체는 DTI 대출 규제 완화·세제 혜택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 격론=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최정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준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땀집식 처방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DTI 논란 확산=한나라당 내에서 DTI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반대론자들은 DTI 규제를 풀 경우 오히려 가계대출 부실화, 부동산투기 등을 조장할 수 있어 친서민 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TI 규제 완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대출 규제 완화·세제 혜택 절실”=주택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실

▲DTI(총부채상환비율)=주택 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인건·경기지역은 6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일정 부분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수의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는 만큼 상한제를 폐지해도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상한제 탓에 자재 사용에 한계가 있어 고객이 외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남뉴스



중소개발 '범죄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20일 전남대 용지관에서 열린 2009년도 산학협력사업 성과 전시회에서 (주)포커스테크 선홍기(왼쪽에서 두번째) 회장이 '범죄차량 번호인식·검거 영상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C(폐쇄회로)TV로 용의차량의 번호를 자동인식해 경찰서 등에 전파, 검거를 쉽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광주 수출 100억弗 청신호

車·반도체 호조 힘입어 2007년 이어 달성할 듯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무역 수지가 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수출액이 52억달러를 기록한 상반기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8% 증가한 197억7300만달러, 수입은 45.8% 증가한 191억4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5억31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지역별로 광주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증가한 51억9600만달러, 수입은 43.9% 증가한 25억22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6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상반기 호조를 이끌었던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가전 부문 수

출액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증가한다면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 품목별 수출은 가전제품(50.0%), 반도체(26.5%), 수송장비(23.7%)를 비롯해 가죽·고무 및 신발류(47.4%), 기계류와 정밀기기(45.9%) 등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경공업원료(72.2%), 전기·전자기기(45.1%), 기계류와 정밀기기(19.3%) 등이 증가했다.

전남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 증가한 145억7700만달러, 수입은 46.1% 증가한 167억2000만달러로 무역수지 21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철강재(-33.5%)와 석유제품(-11.7%) 등이 감소했지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81.3%), 화공품(52.6%), 철광(39.5%) 등이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자리 창출 제조업체

광주시 취득·등록세 면제

광주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시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최초 보조금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광주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82곳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목포- 자동차·컨 물류
- 여수- 해양관광 레저
- 광양- 국제물류 중심
- 완도- 동남아 교역 거점

전남 항만 특화 개발

하도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 컨테이너·자동차 등 품목별 전용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수항은 광양항의 배후단지 개발 전략과 연계한 지역 거점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해양관광 중심항만으로 육성된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양관광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여수항의 경우 엑스포에 맞춰 8만급 크루즈 부두가 계획중인 만큼 대형 크루즈항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광양항은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제철·석유

화학 등 주변에 밀집한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부두별 기능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한다. 완도항도 일본 및 동남아 교역창구로 특화하고 항만 진입도로와 여객터미널, 카페리 부두 등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여객수송 및 도서관광의 중추 항만으로 개발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4개 항만의 차별화된 개발 방안이 정부와 협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자체 공사 연대보증 폐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계약 해지 시에는 사유를 구체해야 한다. 또 입찰 자격 사전심사시 변별력 강화와 심사기준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정비해 입찰의 투명성도

높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두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와 대학 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36.77 (+4.82)
▲ 코스닥지수	499.72 (+1.23)
금리 (국고채 3년)	3.92%
▼ 원·달러 환율	1,20.70원 (-9.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